



목차

- 01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노동자 선언
- 03 여는 글
“스물여덟 어엿한 청년이 된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 05 세월호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달라졌을까?
- 11 세월호 이후 10년... 우리 일터는 달라졌을까?
- 15 윤석열 정권 생명안전 후퇴와 개악
- 26 민주노총의 22대 총선 요구
- 27 안전 일터를 위한 작업중지권
- 37 안전 사회를 위한 생명 안전 기본법
- 41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 45 십자말풀이
- 47 세월호 10주기 추모사업 안내
- 49 인증샷(표지 뒷장)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노동자 선언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노동자 선언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노동자들은 한해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산재사망과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재난 참사를 멈춰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 우리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정책을 막아내고 '작업중지권'과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3. 우리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재난참사피해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연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노동자 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과 다짐은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입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투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투쟁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동자의 선언입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4월 실천

- 노동자 선언
- 키팅, 리본 달기
- 단위 사업장 현수막 걸기
- 가맹 산하조직 현수막 걸기
- 교육지 노조 게시판 부착
- 4월 16일 추모 인증샷
- 4월 첫주, 셋째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참가
- 4월 24일 전국 집중 집회 참여
- 4월 넷째 주 지역별 추모사업 및 투쟁 참여

여는 글

스물여덟 어엿한 청년이 된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스물여덟이 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가끔 상상해 봅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겠지.
여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며 밤새 놀기도 하고,
여전히 게임도 즐기겠지.
직업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겠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겠고, 누군가는 택배 노동자로, 혹은 알바생으로, 공무원으로,
미용사로, 교사로, 연예인으로, 의사나 간호사로 또 작가나 방송인으로,
촬영감독이나 스태프로, 음악인이나 화가로, 혹은 카페나 식당에서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겠지..

우리는 왜 이 304명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304개의 꿈을 지켜냈더라면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을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열여덟에 짓밟혀버린 250명 우리 아이들의 남겨진 꿈들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젊은 청년 청소년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지난 10년을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전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세월호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달라졌을까?

한해에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여전히 반복됩니다. 부실한 안전관리, 무분별한 규제완화, 형식적인 정부 감독, 대책 없는 구조대책으로 시민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눈물과 분노의 행진은 10년 전 세월호에서 이태원 참사로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주요 재난 참사

년도	재난명	피해
2023.07.18	오송 지하차도 침수	14명 사망 9명 부상
2023.04.05	분당 정자교 붕괴	1명 사망 1명 부상
2022.12.19	북의왕 방음터널 화재	5명 사망, 41명 부상
2022.12.19	이태원 참사	155명 사망, 152명 부상
2022.09.06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7명 사망, 2명 부상
2022.08.05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5명 사망 42명 부상
2020.07.23	부산 지하차도 침수	3명 사망
2019.09.24	김포요양병원 화재	3명 사망, 56명 부상
2019.02.19	대구 사우나 화재	2명 사망, 40명 부상
2018.11.09	종로 고시원 화재	7명 사망, 10명 부상
2018.0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	47명 사망 145명 부상
2017.12.2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40명 부상
2017.03.31	스텔라데이지 선박 침몰	8명 사망
2014.10.17	판교 환풍구 붕괴	16명 사망. 부상 11명
2014.05.28	장성 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부상 8명



세월호 참사

- 2014년 4월 16일, 304명 사망
- 선장, 해경 정장 1명은 처벌되었으나, 해경지휘부를 비롯한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불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 피해 신고 7,891명 (사망 1,843명)
- 13년 만에 기업 유죄, 국가책임 일부 인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 2017년 3월31일 22명 실종
- 6년 11개월만에 선사대표, 해사본부장 금고형 판결. 불구속



이태원 참사

- 2022년 12월 29일, 155명 사망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특별법 거부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참사

- 2021년 6월 학동 철거 붕괴, 9명 사망
- 2022년 1월 화정동 붕괴, 6명사망
- 현장소장과 하청만 처벌되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은 무력화



오송지하차도참사

- 2023년 7월 14명 사망
- 현장소장등 기소. 지자체장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 없음

정부가 외면한 오송참사 진상규명, 시민의 힘으로 시작한다!

2023년 12월, 시민사회와 사회적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전문가들이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국회가 침묵하고 있는 오송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1차 조사를 통해 재난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들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폭우에 무너진 제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 역시 확인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열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기후재난의 시대, 7월 15일 폭우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알림문자만 수십 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난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지방정부는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여러 차례 위험을 경고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이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참사 당일부터 재난의 위험을 관리감독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충북도지사는 “막을 수 없는 자연 재난이었다”, 청주시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 행복청장은 “부실시공의 책임이 없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고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반복되는 참사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와 처벌로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도 없고 대책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를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를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최고책임자를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책 말고 참사를 멈추게 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7월 15일로 멈춰버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시간을, 여전히 고통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일상을 되돌려 주십시오. 오송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

세월호 이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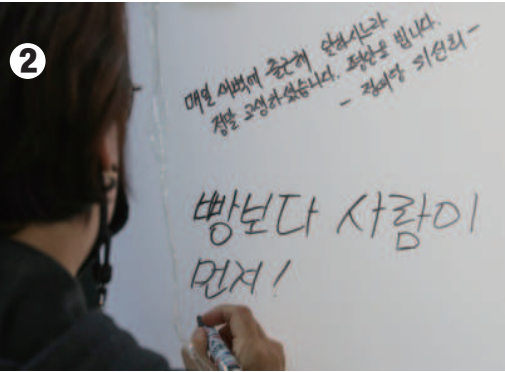
우리 일터는 달라졌을까?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일터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재 사고사망 500명대로 감축??? 이라는 정부 주장은 통계 기준을 바꾸고, 사고 사망만 따지는 통계 놀음일 뿐입니다. 매년 과로사망만 500명, 단순한 안전설비 문제로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일터의 세월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 (2023 산업재해 현황분석/산업안전공단)

년도	산재보험 보상 사망 (사고사망)	공무원, 사립학교, 직업군인 산재 사망	계
2022	2,525 (874)	134	2,659
2021	2,348 (828)	99	2,447
2020	2,326 (882)	89	2,415
2019	2,280 (855)	90	2,370
2018	2,415 (971)	126	2,541
2017	2,209 (964)	105	2,314
2016	2,040 (969)	90	2,130
2015	2,066 (955)	75	2,141
2014	2,134 (992)	177	2,311



- ① 현대중공업 474명 산재 사망
- ② 피 묻은 빵을 먹지말자. 시민 분노에도 또 사망. SPC
- ③ 과로사 택배 노동자 과로사 게임, 방송 노동자 과로사
- ④ 2년 만에 7건 8명 사망한 디엘 이앤씨 /건설업 산재사망 매년 400명 이상
- ⑤ 학교급식 폐암 산재 인정 113건 개선 대상 학교 9,043개중 개선은 231곳. 개선률은 3% 미만.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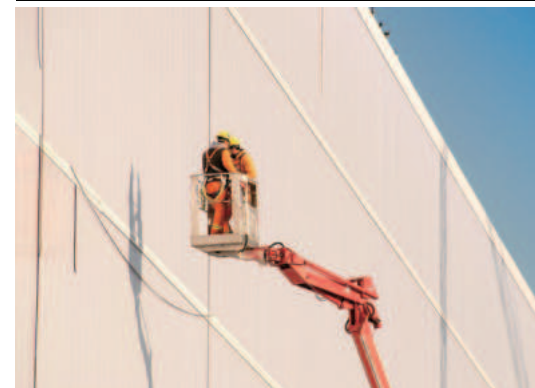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중대재해 510건
노동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102건
검찰 기소 33건, 재판은 13건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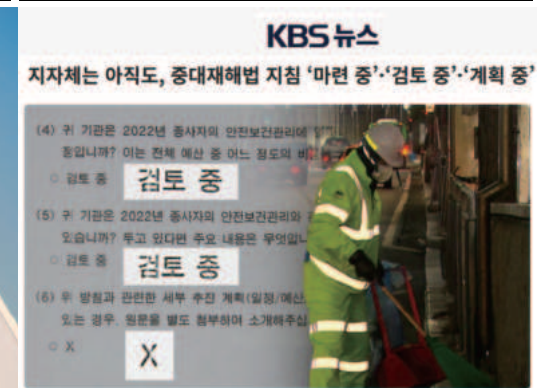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삼표



울산 s-에 대표이사도, CSO도 불기소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원청 대표이사 처벌
그러나, 검찰의 낮은 구형-실형은 1건



수사와 기소를 늦추고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 처벌 0건으로 법 무력화



윤석열 정권 생명안전 후퇴와 개악

윤석열 정부의 시대 역행과 역주행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킬러 규제, 채 상병 순직 사고 등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 1년에 과로사 500명인데 주 69시간 노동 추진은 진행형

최장 노동시간으로 1년에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망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개악을 추진했고, 노동자 시민의 3분의2가 반대하는 거센 역풍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 직종으로 좁혀서 추진하고 있어, 노동시간 개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 화물노동자, 시민 안전 위한 화물안전운임제 폐기 !!!

특수고용과 다단계, 지입 구조로 화물운송 노동자는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중 화물차 연관 비율이 75%로 노동자 시민의 반복적인 사망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안전운임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가 한 연장 약속도 팽개치고 화물안전운임제를 폐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 노동자의 월 소득은 3분의1넘게 줄고, 수입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노동시간은 매달 44시간 늘어났습니다. 졸음운전, 과속 등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TF발족 등 개악 추진이 지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고, 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두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를 <민생>으로 둔갑시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나서 빵집, 식당 사장님도 감옥 갈 수 있다는 공포사기극을 벌리고, 법 시행일 (1.27)이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대통령실이나서 개악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총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이 속출하고, 노동자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든 정부, 기업, 보수 언론의 언론 폭탄 공세에도 노동자 시민의 71%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노동자 시민의 흔들림 없는 요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찬반 여론조사>

조사외뢰	조사기관	조사시기	적용해야	적용유예 연장해야
민주노총	서던포스트	2023. 12.15	71.3%	27.4%
서울경제	갤럽	2023. 12.18-19	68%	28%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메트릭스	2024. 02.03-04	55%	36%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2024. 02.16-18	69.5%	23.8%

○노동자 책임 강화, 기업 처벌 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처벌 보다 예방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책임은 강화, 원청의 책임은 완화하고, 법 위반의 처벌 규정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대상을 축소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과 원청 처벌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그나마, 대대적으로 선전한 <위험성 평가 처벌 도입> 조차 법 개정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킬러 규제'산재 카르텔'사기극으로 건강권 위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반복되는 화학사고로 강화된 화학물질 관리는 <기업을 위협하는 킬러 규제>로 둔갑시켜, 화평법, 화관법의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대상을 완화했습니다.

산재 카르텔로 보험 재정이 샌다며 산재환자를 나이롱환자로 모욕하고,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갈빵 처럼 내용이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한 산재환자 사례도 집중 공격한 <근골격계 질환 추정 의 원칙>도 부정수급은 없었습니다. 경영계 요구 이행을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명단 공개도 못하는 <산재보험 TF>로 <산재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청취 부활> <소음성 난청 보상범위 축소> <치료 기간 단축> <휴업급여 감액> 등 전방위적인 산재보험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 안전과 운임

윤석열정부가 안전운임제도를 일몰시키고 1년, 화물운송산업의 운임은 20%가 급락했고 화물노동자의 일평균 수면시간이 26시간 감소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화물운송산업, 화물노동자들은 심각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연대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조합원 86.1%가 안전운임제 일몰 후 과속, 과적,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안전운임제가 없어도 충분한 운임을 협의하고 지급하겠다는 화주와 운송사들은 제도 일몰 후 다양한 핑계를 대며 우후죽순 운임을 삭감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이제 더이상 코로나 시기의 특수한 조건이 아니다. 국제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물류산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동량과 유가비용 등을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화물노동자가 자신의 소득과 노동조건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특성상 운임에 원가비용을

반영하고, 화주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망이 없다면 “일할 수 있을 때 바짝” 버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 개입과 안전망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일몰시키고 방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도로’라고 하는 작업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화물노동자의 특성 상 현장의 안전문제는 곧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은폐된 수많은 화물노동자 산재사고가 오늘도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다. 산재 책임을 묻고 추모할 여유도 없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 안전운임제가 답이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 박연수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거부

채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 이종섭 장관 빼돌리기

155명의 청년, 시민들이 거리에서 압사로 죽어 나가도
공명심에 눈먼 수해복구 투입 지시로
20대 청년이 죽어 나가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정부 책임자는 없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하고
채 상병 사고 책임자 수사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더니,
은폐에 급급해 이종섭 장관 빼돌리기 까지...
“그 정도 일에 장관을 그 정도 일에 사단장을...”
“그 정도 일에 기업 대표이사를 ...”

노동자 시민의 죽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정도 일>입니다.



일터의 안전과 안전한 사회 노동자가 안전해야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안전해야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안전한 사회가

노동자가 안전해야 안전한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

- 경북 구미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누출된 불산
-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인근의 농작물 가축의 피해는 물론, 주민 1만2천명이 병원 치료, 특별 재난지역 선포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 서울 지하철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설비
- 수리 노동자 사망. 부실시공, 관제, 정시운행으로 정비 부족, 위험의 외주화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스크린 도어 노동자 사고도, 시민 사고도 절반으로 감소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 현대산업개발의 철거공사 붕괴로
- 현장 옆 버스정류장 시민 덮쳐 참사.



고양 터미널 화재 참사

-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발생으로 9명 사망, 60명 화상
- 터미널 푸드코트 용접작업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화재 발생.
- 스프링 쿨러 차단등 소방 대책도 부실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

- 2023년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로 노동자 7명 사망.
- 안전조치 위반, 소방법 위반, 대형 시민 참사로 이어졌을 것



메르스, 코로나 감염병

2016년 메르스 사태 병원의 간병 노동자, 응급기사 등 비정규직 감염. 외주화, 비 정규직이 넘쳐나는 병원에서 감염정보, 예방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짐.



16시간 버스 운전, 대형 교통사고 시민참사로

2017년 전날 16시간 일하고 다시 운전한 광역버스 기사 노동자의 졸음 운전으로 2명 사망, 16명 부상.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로 법적제재도 없었음

버스운송업의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13.7% 감소

민주노총의 22대 총선 요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 모든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및 보상 확대
-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
- 안전작업 인력 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
-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상병수당 병가제도 도입



안전 일터를 위한 작업중지권

당장 멈춰 위험 작업!

- 1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 2 작업중지시 하청노동자 휴업 수당과 손실 보장
- 3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 소송 등 불이익 처우 금지
- 4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 “위험작업은 사전에 중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이후에 작업”
- “급박한 위험 발생하면 작업중단하고, 개선 완료 이후 작업”
-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에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
- “작업 중지로 임금이나 고용, 하청업체의 불이익이 없는 것”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안전문화입니다.



작업 중지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급박한 위험	사업주 (산안법51조)	급박한 위험에 즉시 작업중지. 노동자 대피 등 안전보건조치
	노동자 (산안법52조)	-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권리--> 관리감독자 및 부서장 보고-> 안전보건 조치 -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합리성 판단은 노동자가 기준 - 작업중지 대피 노동자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노동부 사용중지, 작업중지 (산안법53조)	- 안전조치 미비로 현저한 위험 발생 우려 시 사용중지, 대체, 제거, 개선 및 시정조치 -->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위험 현저히 높아지면 해당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 시정조치 완료 후 해제 요청-->시정조치 완료 판단 시 해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 (산안법54조)	-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즉시 작업 중지 노동자 대피, 안전보건조치. 지체 없이 노동부 보고
	노동부 (산안법55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다고 판단 시 작업중지 명령 - 부분 작업중지 명령 : 해당작업, 동일작업 - 전면 작업중지 명령 : 붕괴, 화재, 폭발, 누출등으로 주변으로 산재확산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 노동	사업주 및 노동자 (산안법41조)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게 건강장애 발생,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조치 노동자는 업무중단 전환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 조치 금지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46조)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위반은 불법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의 사용중지,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등 작업중지 명령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노동자가 업무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 벌금)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 기준 (202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노동자 작업대피-> 보고 -> 안전 및 보고에 관한 조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한국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대피권 수준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작업재개, 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현장 실태

화학물질 누출에 소방본부도 마을 이장도 대피방송

그러나 회사는 작업 중지한 지회장에 정직 3개월

8년 만에 대법원이 인정한 작업중지권. 재판은 진행 중

2016년 금속노조 컨티넨탈 인근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소방본부도 마을 이장단도 대피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예방조치 권고도 받은 회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차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20 여명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까지도 더 멀리 떨어진 사업장 30명이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고였지만, 회사는 작업중지를 한 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8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23년 11월 작업중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파기 환송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작업중지권 조차 징계, 손해배상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보전도 공기 지연과 손실도 하청 에게만 남기는 원청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에도 원청은 하청업체의 손실이나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노동자 스스로 거부하라는 정부. 작업을 거부하면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원청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으니 동료 노동자 산재 사망 공범?

2022년 경북의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했지만, 같이 일했던 굴착기 노동자도 <공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사업주가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작업을 중단하고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업중지권 행사하면 회사가 징계,
위험작업 거부 못하고 발생한 사망사고는
공범이 되는 것이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현 주소

외국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과 ILO 협약

2022년 국제 노동기구인 ILO가 기본 협약으로 격상시킨 155호 산업 안전보건 협약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더불어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중국	안전생산법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한 작업명령도 거부권 부여.
캐나다	-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거부권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 되는 경우도 부여 - 위험에 대해 노사간 판단이 다르면 노사 모두 동의할 때만 작업 거부권 반복 가능. 사업주의 일방적업 재개 불가
프랑스	-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중지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 둘 수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확대되는 작업중지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위해 노동자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포상 확대

1. 우수작업중지권 즉시포상
2. 포상내용
매월 : 최대 등록 2개팀 (원월 전월 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
매주 : 5명 (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
3. 우수 작업중지권 신고 시 노무비의 2배를 지급!
* 작업 중지 시간의 노무비 2배 현금 지급

우수 작업중지권이란?
사고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타인의 안전까지 고려한 A급 작업중지권

기준 : 신고내역에 100% 응급진료요청을 신청한 장외에서 10명
기준 : 100% 응급진료 요청 및 위험요인 제거
기준 : 100% 응급진료요청 및 100% 복귀 신고

발행처 : P4 PH2(FAB) 팀장



00 물산 2021년 이후 113개 현장에서
5만3천건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작업중지 많이 사용한 노동자 보상,
협력업체 차기 계약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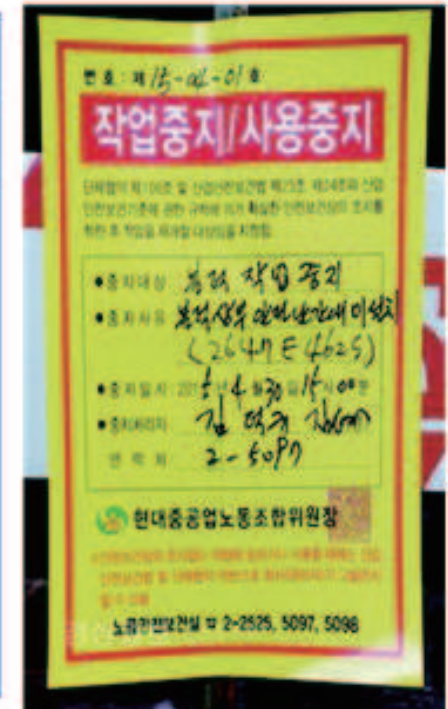
-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 사업
장인 시설공단
-작업 거부권 행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의결



민주노총의 위험작업 중지권 투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의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발동 활동, 건
설노조 전기원 분과의 감전 사망 발생에 대해 전국적인 위험작업 거
부 투쟁,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대해 전화를 끊을 권리를 처음으로
단협에 명시한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 시민안전을 위해 오존발생설
비 작업중지를 실시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발동과 재발방지 대책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1.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연속적으로 동시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의 개별 작업 거부권은 의미도 실질 작동 가능성도 없습니다. 2015년부터 선주의 요구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정착을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던 현대 중공업. 그러나,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실질화의 열쇠였습니다.

2.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를 해고, 징계하는 사업주 처벌 법제화

- 1995년부터 도입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무력화 된 것은 징계와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 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을 원청이 책임지도록 법제화 되지 않으면 저가 낙찰과 저임금에 허덕이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현실화 될 수 없습니다.

- 건설노동조합의 기나긴 투쟁으로 폭염시 작업중지를 하는 공공 건설현장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공기, 손실 보전을 국가예약법에 명시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적용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폭염 폭우 등 기준 명시

- 급박한 위험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이 재해의 선제적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 기후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폭염, 폭우, 폭설, 강풍 등에 대한 작업 중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5.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 작업중지 이후 완전한 개선조치가 되기 전에 사업주의 작업재개를 허용하는 것은 작업중지권 보장이 아닙니다.
-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위반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가 명시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단위조직의 작업중지권 보장 단체협약 체결과 실질 적용 투쟁
-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
- 노동자 참여 및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입법 투쟁 전면화

전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쟁취합시다! **위험작업 당장 멈춰!**

안전 사회를 위한 생명 안전 기본법

21년 전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부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피해자 유족들은 스스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동료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분노했고, 또 다른 재난 참사의 피해자 유족에게 같은 고통이 반복 되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재난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까?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3년 5만 동의 청원을 달성한 생명안전기본법. 민주노총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산재 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 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D-day!
오늘 밤 12시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난과 산재의 반복을 막기 위한 기본법. 나라나리의 안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청원링크 <https://bit.ly/45tzNey>
최종기한 **D-day** (2023. 9. 28)

40,000명 80%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위원회 회부

청원분야	재난/안전/환경
동의기간	2023-08-29 ~ 2023-09-2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50,000명 100%

생명안전기본법 Q&A



Q 생명안전 기본법이 뭐지?

A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 기본사항을 규정한 <기본법>.

Q 생명안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A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

- 안전권을 법에 원칙으로 명시해서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원칙
- 사고는 개인적 불운이 아니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 정확한 정보제공,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작동되도록 함
-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 안전사고 정보를 국가와 기업이 공개, 은폐하지 못하도록 함
- 사고의 예방 및 대처 과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참여보장

- 독립조사기구 상설화.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참여 보장

안전영향 평가제도

- 국가가 각종 정책 시행 전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하도록 함.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

- 사고나 직업병 대응의 핵심적 요구인 공동 조사는 번번이 묵살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참여 보장 등 중대재해 공동조사 노동자 참여 법제화의 발판입니다.

-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강화는 가물에 콩나기 이고, 더 많은 규제 완화가 날마다 쏟아집니다. 환경영향 평가처럼 정부 정책의 시행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생명안전기본법과 일터의 안전

A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기본법 제정은 노동안전 관련 법 개정을 돌파하는 주춧돌입니다.

- 화학물질 등 노동자 알권리 보장은 커녕,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정보는 차단되고 기업 이익을 위한 비공개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기본법의 정보공개 의무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중대재해처벌법 가짜뉴스 Q&A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A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 경영책임자 의무를 준수했는데 발생한 중대재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한국의 산재사망 처벌은 세계 최고 수준?

A - 호주는 25년형, 캐나다는 무기징역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 한국에서도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환경범죄단속법, 연구실 안전환경법 등 안전관련 범죄에서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은 경영책임자 처벌이 어려워 가중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Q 중대재해 처벌법은 모호하다?

A - 2023년 11월 법원은 두성산업이 '법이 모호하다, 과도하다'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무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의무, 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50인(역)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빵집, 식당 사장님도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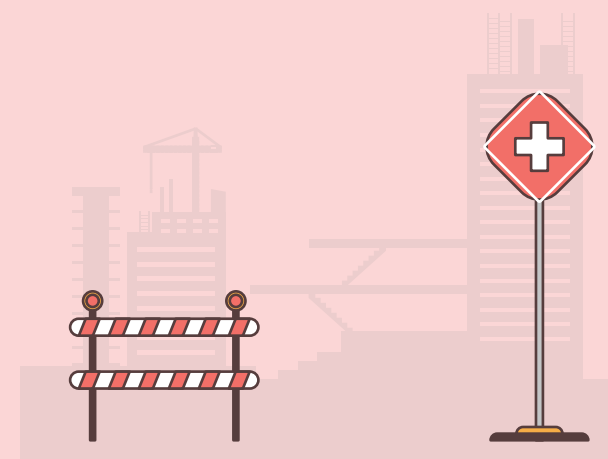
A 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빵집이나 식당은 중대재해 발생이 드뭅니다. 2023년 숙박 음식점업의 산재사망은 1명입니다.

Q 경영도 어려운데 안전관리자 채용 등 경영 부담?

A - 50인(역)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예방을 담당할 사람과 체계를 정하면 됩니다.
- 예방을 위한 설비와 보호구 지급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새로운 추가 예산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알기



중대재해 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

- 사업장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 집행
- 종사자 의견 듣고 개선하는 절차 마련하고 이행
- 6개월에 1번 안전 관련 법 준수 점검하고 개선
- 6개월에 1번은 안전 교육 진행 점검하고 개선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행
- 정부, 지자체의 시정명령등 조치 이행

산업재해도 시민재해도 적용

- 산업재해도 시민재해도 적용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제조물 사고,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등 공중교통 사고, 도로, 댐, 항만 등 시설물 사고등 시민재해 적용으로 성남 정자교 붕괴, 오송 지하차도 침수등이 적용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로사도 직업성암 사망도 적용

- 사고성 재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인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과로사망, 직업성 암 사망등도 적용되고, 메탄올로 인한 실명등 급성중독도 적용됩니다.

1년 이상 형사처벌은 사망에만 적용됩니다.

- 부상과 질병도 적용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7년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의 하한형 형사처벌은 사망에만 적용됩니다.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 추모를 넘어 산자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날

1993년,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인형을 생산하는 태국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밖에서 공장문을 잠갔고 탈출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1996년 제정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전세계에서 추모와 투쟁이 진행됩니다.





십자말풀이

①		①			②				
								③	
				②		④			
									⑧
⑤									
③					⑦				
			⑥						
④					⑤				

가로

- ① <0000>기본법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 ②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은 노동자의 000000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③ 00는 5년형, 캐나다는 무기징역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많다.
- ④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인 0000.
- 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00000를 진행한다.

세로

- ① 윤석열정부가 00000를 일몰시키고 1년, 화물운송산업의 운임은 20%가 급락했고 화물노동자의 일평균 수면시간이 2.6시간 감소 했다.
- ②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0000개발의 철거공사 붕괴로 현장 옆 버스정류장 시민을 덮친 참사가 있었다.
- ③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000을 행사하여 임기 2년만에 무려 9회나 000을 행사했다.
- ④ 0000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을 때 처벌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 의무를 준수했는데 발생한 0000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⑤ 000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여객선이 침몰하여 302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이다.
- ⑥ 작업 도중 급박한 00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 완료 이후 작업 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이다.
- ⑦ 올해로 세월호 참사는 000를 맞았다.
- ⑧ 000 000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피해 신고만 7,891명에 달하며 사망 자는 1,843명이다. 13년 만에 기업은 유죄 선고를 받고,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었다.



십자말풀이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세월호 10주기 기억 시계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곳을 통해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4,160인 시민합창

모집기간 ~2월 29일
 참가문의 031-486-0416 (4.16안산시민연대)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전국시민행진 “안녕하십니까”**

코스 제주-전남-경남-경북-전북-
 충청-강원-수도권
 출발 2월26일(일)제주
 도착 3월16일(토) 오후4시16분
 세월호 기억공간(서울)

**10주기 기억식,
 추모식, 기억문화제**

기억식 및 추모식 4월 16일 / 안산, 인천
 기억문화제 4월13일 / 서울, 안산
 지역별 기억문화제
 인천, 제주, 팽목항 등 전국에서 진행

**4.16 기억전시
 “기억은 힘이 세지”**

기억물품 특별전시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류품 및 미술작품 전시
 기간 4월1일~5월5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전당 화랑전시관

4.16언론보도사진전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의 행동을 담은
 언론보도 사진 전시
 기간 4월12일~4월 25일
 장소 신도림역 전시관